

「주간 북한경제 동향」은
한주간의 주요기사를 정리
하여, 북한 경제의 실상을
이해하고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www.dprkinvest.org

주간 북한경제 동향

Weekly DPRK Business Review

2008년 12월 1일(월)
통권1호(제1권 제18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아남타워 907호

발행처 : 북한투자전략연구소

전 화 02-782-2677
팩 스 02-3452-2312
이 메 일 master@dprkinvest.org

북한투자전략연구소 시론 이 시론은 남북의 여러 사안에 대한 북한투자전략연구소의 생각과 의견을 담은 글입니다.

지금 북한이 할 일은 남북경협의 안정성 보장

11월 24일 북한이 개성공단 운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단기적 효과와 상관없이 북한에게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어렵게 합의한 6.15와 10.4 양대 정상선언이 부정 혹은 무시되는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 화해와 협력을 위해 군사분계선까지 뒤로 물러나 주었는데도 체제 위협을 노골화하는 모습에 분노와 위기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개성공단을 건드리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하겠다.

2000년 8월 북한이 '6.15 공동선언의 선물'로 개성공단을 내놓았을 때 그 바탕에는 정경분리의 정신이 깔려있었다. 정경분리의 정신은 어떠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지켜야 한다.

정경분리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보자.

국민당의 리덩후이 총통 시절은 물론 대만 독립을 주장 해온 민진당의 천수이볜 총통 시절 대만 당국은 중국투자 속도를 줄이려는 계급용인(戒急用忍)정책, 투자처를 중국이 아닌 동남아로 돌리려는 남방정책을 펴면서까지 급속히 증가하는 대만인의 중국 진출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대만 당국이 그럴수록 대만인은 홍콩이나 버진아일랜드 등을 통한 우회투자를 하면서까지 중국 투자를 늘려왔다. 왜 그랬을까?

아무리 중화사상으로 얽여 있는 중국인이더라도 본능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대만 기업인이 민족의식만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이른바 양안관계가 정치, 군사적으로도 조용했기 때문도 아니다. '하나의 중국'을 기본으로 하는 중국이 독립을 주장하는 대만의 행동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음은 누차에 걸친 군사행동 위협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런데도 대만 기업의 중국 투자가 확대일로였던 것은 대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려는 중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중국은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외자기업법』 제정에 앞서 먼저 『대만 동포 투자에 관한 특별우대법』부터 제정함으로써 대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정성을 기울였다. 더욱이 『외자기업법』 제정 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대만동포 투자보호법』을 제정하여 대만 기업을 외국 기업보다 더 우대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가 바로 대만 당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물밑들

어온 대만 기업의 중국 투자였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철저한 정경분리의 원칙이 있었다.

지금 북한이 취해야 할 정책은 바로 이것이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개성을 내줄 때 가졌던 정경분리의 초심을 잃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개성공단만큼은 휘둘리지 않게 한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중국인 그랬던 것처럼 당국간 정치, 군사적 긴장과 대립이 높아질수록 민간의 경제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선행적으로 취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이럴 때일수록 『남조선동포 투자에 관한 특별우대법』이나 『남조선동포 투자보호법』 등을 제정하여 남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공세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2007년 3: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인 개성공단 분양을 보면서 북한도 남한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와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확인했을 것이다. 투자에 대한 이익이 확실하다면 기업은 그곳이 지옥이든 전쟁터이든 가리지 않는다. 하물며 내 민족과 함께 한다는 명분까지 얻을 수 있는 남북경협사업을 마다할 기업은 없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상황일수록 북한은 개성공단을 닫는 수세적인 대응이 아니라 오히려 남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안정성을 보장하는 공세적인 대응을 해야 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지지를 20%대라도 지키려는 이명박 정부가 당분간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나설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북한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의도적인 무시는 북한의 반발을 유도하여 남북관계 경색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대북 비난여론을 고조시켜 북한의 고립화와 대북강경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 대북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고 압박정책을 펴는 것은 별무소득일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극우보수세력의 의도에 휘말려 남북관계 정상화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일 수 있다.

오히려 지금은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고, 투자 여건을 안정화하는 등 정경분리의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럴 때일수록 개성공단을 닫는 것이 아니라 3통 등 생산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고, 남한과 해외자본의 투자 의지를 북돋우기 위해 제도적 안정 방안을 강화하는 것. 이러한 대응이 더욱 효과적이다.

무릇 진정한 의미의 광복(廣幅)정치, 통 큰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18호 목 차

이주의 칼럼

거꾸로 가는 남북관계 2

이주의 주요 기사

“개성공단 그것 하나가 무슨...” 집권여당의 안이한 인식 3

“北, 개성공단 축소하고 신의주특구 개방한다” 4

MB 정부 ‘5대 무시’에 남·북관계 파탄 위기 5

개성공단, 투자비 1조4천억이나 들었는데... 6

‘반시장주의 강경파’ 김일근, 특구 총국장에 임명한 까닭은? 7

개성공단 기업들 “예측불능, 신인도 추락...난파선 같다” 8

DJ “MB 남북관계 의도적 파탄” 9

野 시민단체 남북문제 “反MB 연합” 10

NKorea prepared to shut down Kaesong estate: analysts 11

北の日本人拉致、国際社会が認識を 英下院外交委が報告書 11

추천논문 / 개성공단 개발에 있어 정경분리 현황과 개선 방향 12

함께 보는 최근 북한단신 / 12

이주의 북한 관련 행사

●제4회 동북아미래포럼

▶주제 : 오바마행정부 출범과 동북아 미래비전

▶일시 : 2008년 12월 2일(화) 14:00

▶장소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정산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96회 과학기술정책포럼

▶주제 : 남북 과학기술 협력의 새로운 지평

▶일시 : 2008년 12월 3일(수) 11:00

▶장소 :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정책포럼

▶주제 : 미국 오바마 정부와 한반도 정세

▶일시 : 2008년 12월 5(금) 14:00

▶장소 : 4.19혁명 기념 도서관

●동북아물류인프라 투자정책 제언 정책토론회

▶주제 : 대륙 물류 주도권 확보를 위한 동아시아 교통 인프라 구축방안

▶일시 : 2008년 12월 15(월) 10:00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이 주의 칼럼

거꾸로 가는 남북관계

권영철(CBS 보도국 해설주간)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있다.

북측은 다음달 1일부터 개성관광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통보했다. 남북화해 협력의 상징이던 금강산관광에 이어 개성관광마저 중단되는 것이다.

북측은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역의 남측 당국 관련 기업들의 상주 인원과 차량을 선별 추방하고 그동안 개방했던 군사분계선을 다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10년 동안 쌓아온 남북 당국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누구 탓을 하기 전에 원인을 제대로 따져야 해결방안이 나올 것이다.

우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략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피격사건이 터진 7월 11일 국회개원 시정연설에서 “과거 남북간에 합의된 선언들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지 북측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8.15 경축사에서는 “금강산 피격 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면적 대화와 협력에 나서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대북정책의 기조변화를 시사하는 발언들이다.

그러나 지난 12월 중앙언론사 논설·해설실장 간담회에서 “대화가 끊어져 있는 것도 전략이다. 이럴 때 우리가 침묵을 지키는 것도 전략이다”라며 한 발 물러섰다. 그러다 지난 15일 워싱턴 특파원간담회에서는 “자유 민주주의 하에서 통일하는 것이 최후의 궁극목표다”라며 속

내를 드러냈다. 게다가 지난 22일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면서 북한을 자극하는데 앞장서는 결과를 초래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을 지원한다거나 대화하자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부추긴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대북관계도 큰 틀에서는 외교이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따라오기를 강요한다면 외교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대화를 하자면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뼈대를 날려보낸다거나 상대방의 정책을 비방한다면 진정한 대화의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의 처사가 온당하다거나 북한을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의 경색은 남북 양측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한다.

만 10년이 지난 금강산관광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서해에서 ‘연평해전’이 일어났을 때나, 북한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됐을 때도 멈추지 않았다.

남북 양측이 최소한 ‘대화의 물’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 글의 원문은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994329>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민노, “남북관계 악화 막는다면 ‘2중대’도 상관없다”

-- 11월 25일 노컷뉴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남북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손을 잡았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만큼은 민주당의 2중대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고 나서는 한편, 햇볕정책의 창시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하는 등 전방위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난 16일 북한을 방문했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25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찾아 정세균 대표를 만나 최근의 남북관계와 관련한 주파수를 조율했다.

강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북측에 가서 역할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그런 역할할 단계가 이미 지났구나라고 느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고 청와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강 대표는 이어 “10년동안 만든 탑을 위에서 허무는 것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 발언 자체가 기초를 허물어 뜨리는 발언을 하고 계신거 아닌가 생각한다”며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고 현재의 남북 정세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강기갑 대표 등 민노당 방북단의 방북에 대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지금 민노당의 심정으로 나서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민노당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배해동 “개성공단 피해 생기면 정부가 보상해야”

-- 11월 25일 노컷뉴스

개성공단기업협의회 부회장인 배해동 태성산업 대표는 “현재로선 정부에 보상을 요청할 생각이 없지만 추후에 (개성공단 중단 등으로) 피해가 생긴다면 그런 부분들에서는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대표는 2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를 믿고 (개성에) 들어갔는데 손해가 있으면 보상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다만 배 대표는 “어제 북측 인사와 면담하기 위해 개성에 들어가면서 ‘이러다 공단까지 중단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기업 활동에는 이상 없게 하겠다’고 북측에서 밝혔기 때문에 현재로선 많이 안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 대표는 정부에 대해서는 여전이 불멘 소리를 냈다. 배 대표는 “최근 통일부 장관과도 회의를 했는데 아직 (정부측으로부터) 개성 문제와 관련해 북측과 열심히 접촉하려고 하는데 잘안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우리는 통로가 막혀있으니까 (정부가 나서서)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남북간 관계가 안좋으면 개성 가서 일하는 기업들도 이상해지고 피해를 보는 등 기업들이 정치적 영향을 받아서여 되겠느냐”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힐, “北에 중유 제공할 제3국 한국 주도로 알아보고 있다”

-- 11월 25일 뉴시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23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북한에 제공할 중유제공 국가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은 북핵 불능화 약속을 완성할 수 있도록 중유제공 국가가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조지 W.부시 대통령과 함께 현지를 순방길에 나선 힐 차관보는 이날 리마의 메리엇 호텔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같이 말했다.

힐 차관보는 현재 북한에 제공될 중유 제공국가를 한국 정부가 주도해 주선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어, 북한에 중유를 제공하러 선뜻 나서는 국가가 없다는 점과 함께 대북중유제공 스케줄에 이상이 생겼음을 암시하기도 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우리는 (북한에 중유를 제공할) 다른 나라를 찾는데 노력해왔다”고 전제하고 “한국 정부가 이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몇몇 국가는 나섰으나 더 필요하다”고 말해 중유제공 일정에 다소 지장이 되고 있음을 드러냈으며, 북한이 최근 시료채취 거부 등의 움직임이 이같은 점과 연계되지 않았느냐는 추측을 불러 일으킨다.

“개성공단 그것 하나가 무슨...” 집권여당의 안이한 인식

-- 11월 26일 노컷뉴스

“개성공단 그것 하나가 우리 경제에 무슨 악영향을 미치는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발언 내용이다.

박 대표는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남북관계가 개성공단까지 폐쇄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질문에 “개성공단이 누구를 위한 공단이냐”며 “북한은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쪽에는 개성공단 정도의 공단은 수백 개가 있다”며 “그것 하나가 우리 경제에 무슨 큰 영향을 미치겠냐”고 말했다.

개성공단은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남북경협 사업이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 기업 부도와 대규모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측 기업은 모두 88개로, 생

산설비와 인건비 등으로 투자된 금액이 기업별로 평균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폐쇄될 경우 4천5백억원 가량의 직접적인 투자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함께 기업들의 직접 투자 손실 뿐 아니라 철도와 도로를 물론 개성공단 조성 등에 투자된 약 1조원의 자금도 공중으로 날아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당 지도부가 이번 사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 중진 의원은 “지금 남북관계가 살얼음판인데 공당의 대표가 개성공단에 대해 ‘그것 하나 정도’라고 공개적으로 폄하한 것은 경색 국면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는 3만 5천명이고,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50,000여 명의 북한 주민이 직간접으로 개성공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셈”이라며 “남북관계에 미치는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北, 개성공단 축소하고 신의주특구 개방한다”

-- 11월 26일 연합뉴스

북한은 개성공단을 축소하고 신의주특구를 대외교역 기지로 본격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들은 26일 북한이 개성공단 축소 방침을 발표한 지 하루만인 25일 새벽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신의주 산업시설을 시찰했다는 보도가 나온 점에 주목하면서 이는 신의주특구 개방을 시사하는 하나의 수순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건강이상설’이 나돌고 있는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관계에 찬바람이 부는 시기에 중국과의 국경지대인 신의주 산업시설을 시찰한 것은 신의주특구 개발과 개방에 대한 열의와 의지를 읽게 해준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신의주특구 개발은 중국측과도 협의를 한 것이며 중국 측도 신의주특구 개발·개방과 연계해 인접도시인 단둥(丹東)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베이징 당국은 또 신의주-단둥 연계 개발을 위해 군부와 상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중국이 조만간 북한에 7억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할 계획인데 이 차관이 신의주 개발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미 전문가, “北 개성공단 폐쇄 위협, 미북에도 악영향”

-- 11월 26일 노컷뉴스

북한의 대남 강경책이 북한과 미국 관계에도 좋지 않

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미국 국방분석연구소의 오킨 박사는 “북한은 미국과 고만 교섭을 하고 한국을 따돌리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미국 사람들 속에는 북한 문제와 심리를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생겼다”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대미전략에서 좋지 않고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말했다.

미국의 민간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에반스 리버어 회장도 “만일 북한이 개성공단의 직원을 추방하는 등 그동안 밝혀온 대남 압박책을 실제 행동에 옮긴다면 이것은 남북한 관계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도 이러한 북한의 행동을 매우 부정적으로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맨스필드재단의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플레이크 대표도 “개성공단을 통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북한이 독선적으로 이를 폐쇄한다면 앞으로 북한은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투자를 받기가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업체 피해구제책 있나

-- 11월 26일 연합뉴스

북한이 다음달 1일부터 강도높은 육로 통행 제한·차단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측이 비록 개성공단 활동은 ‘특례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대남 강경조치의 수위를 높여 개성공단을 폐쇄할 경우,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게 이들 업체다.

이럴 경우 이들 업체를 위한 구제책은 어떤 게 있을까.

입주업체들은 만일 북측 귀책사유로 투자분에 대한 손실을 입게되면 남북 교역·경협보험의 손실 보조를 받을 수 있다. 2004년 시작된 이 제도는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 지역에 국내 기업이 투자한 뒤 북측의 강제 수용·송금 제한·당국간 합의 불이행 등에 따라 손실을 입은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그 손실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다.

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은 약정금액 한도(개성공단 기업의 경우 50억원)안에서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 개성공단 88개 입주기업 중 70여개 기업이 이 보험에 가입해 있다.

보험 가입 기업들은 유사시 최대 50억원 한도 안에서 90%까지 계약·투자금액에 대한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다.

나아가 ‘남북 경협사업 촉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100억원까지로 보상 한도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손실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는 북한 당국에 의한 투자재산 몰수 및 박탈 또는 권리행사 침해, 각종 북한내

정변과 북한 당국의 일방적 합의서 파기 등에 따른 6개월 이상의 사업정지나 사업의 불능화 등이 포함돼 있다.

북한이 공단을 폐쇄하고 기업들을 추방시키는 경우도 이 같은 손실 보조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손실 보조를 받으려면 공단이 단시간내 정상화되기 어렵다는 정부의 판단이 수반되어야 한다.

공단이 폐쇄되더라도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재가동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손실 보조 결정을 하려면 당시 남북관계 상황에 기반한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다.

또 이 같은 경험보험의 손실 보조를 100% 받더라도 공단 폐쇄시 기업들이 입을 손실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공단 관계자들은 말한다. 무엇보다 이 보험은 투자한 부분에 대한 보상 성격이라, 폐쇄 전에 발생하는 각종 영업상의 손실은 구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MB 정부 '5대 무시'에 남북관계 파탄 위기

-- 11월 26일 한겨레신문

2000년 6월 첫 남북 정상회담 이래 어렵사리 일궈온 남북 협력과 신뢰가 이명박 정부 출범 9개월 만에 무너지고 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북한에 끌려다니던 잘못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불가피한 조정기'로 치부한다. "기다리는 것도 때로는 전략"이라는 이 대통령의 '지침'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상대방과의 약속이나 기존 원칙, 정세 변화 등을 무시하고 도그마에 빠진 것이 남북 불신과 갈등의 악순환을 불러온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1. 합의 무시, 6·15·10·4선언 거부 관계악화 시발점

남북관계 악화의 시발점이자 핵심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무시다. 이 대통령은 3월26일 통일부의 업무보고 때 "가장 중요한 남북한 정신은 1991년에 체결된 기본합의서"라고 강조하며, 두 정상선언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2. 상대 무시, 선제타격 발언·빠라...북 자극 잇따라

올해 들어 북쪽의 대남 강경조치 앞에는 예외 없이 북쪽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남쪽의 '도발적 무시'가 있었다. 김태영 합참의장의 대북 선제타격 발언(3월26일)이 나오자, 북쪽은 경협협회사무소 당국자 철수(3월27일), '남측 당국자들의 군사분계선 통과 전면 차단'(3월29일) 등으로 응수했다. 최근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관련한 남측 당국자들의 '급변사태' 언급,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빠라) 살포, 이 대통령의 '자유민주체제 통일' 발언,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이 잇따르자, 북쪽은 개성관광 중단 등의 '11·24 조치'로 맞대응했다.

3. 실천 무시, '인도적 지원' 등 실천없이 말만 앞서

이 대통령 등은 '진정성'을 거듭 강조하지만, 말을 넘어서는 행동이 없었다. 옥수수 5만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은 '달라면 주겠다'며 몇달째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 북쪽의 핵신고서 제출(6월26일)과 영변 냉각탑 폭파(6월27일),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발효(10월11일) 등 북핵 문제에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핵문제에 진전이 있으면 경협에 적극 나서겠다던 이 대통령의 약속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4. 원칙 무시, 대북정책 정경분리 원칙마저 깨뜨려

이명박 정부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강조하지만, 실상은 '무원칙'하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태우 정부 이래(김영삼 정부 제외)로 남측 정부는 '정경 분리'의 원칙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은 핵문제에 경협을 건 정경 연계 정책으로, 기존 정경 분리 원칙에서 벗어났다.

5. 정세 무시, 미 대북대화 주창에도 '마이웨이' 고수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직접대화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공언하는 등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가 오고 있지만, 이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은 '한·미 공조에 이상 없다' '뭘 바꾸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인 한국의 입지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위기의 남북관계] 北의 잘못 3가지... 南의 잘못 3가지

-- 11월 26일 한국일보

북한이 24일 개성관광 중지 등 대남 압박수위를 극점으로 끌어올리면서 남북관계 단절의 위기가 현실화하자 남북 양측의 지도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협력사업에 정치논리를 들이대고, 국제사회의 상식도 지키지 않는 북한의 행태는 가히 목불인견(目不忍見) 수준이다. 하지만 강온대책으로 오락가락하고, 대북 포용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의 처신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남북이 정면충돌로 치닫는 치킨게임에 몰두하는 동안 죽어나는 것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북한 인민들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 큰 결단 만이 난국을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북한의 가장 큰 과오는 개성공단이라는 경제문제를 정치논리의 불모로 악용한다는 점이다. 개성공단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의 옥동자다. 북측 당국자들은 틈만 나면 "개성공단은 우리 장군님의 결단으로 가능했다"고 말해왔다. 상주인원 1,600여명, 남측 기업 88개로 궤도에 오른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는 카드로 이명박 정부를 압

박하는 북측의 태도는 언행 불일치의 극치다.

이명박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 이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다. 2월 취임사에서 실용주의 대북정책을 강조하던니 이후에는 상호주의를 강조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는 게 최후 목표”(15일)라고 흡수통일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했다가 “나는 대북 강경파가 아니다”(22일)고 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대북 포용력도 너무 부족하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10월 이후 북한이 계속 남북관계 전면 중단을 경고해왔지만 “할 테면 해봐라”라는 자세로 일관했다. 지난 12일 북측이 행동에 돌입하자 대북 유화책을 내놓기 시작했지만 게임은 끝이었다.

“개성공단, 선전 같은 경제특구로 지정될”

-- 11월 26일 중앙일보

중소업체가 개성공단을 중국 남부의 선전 같은 경제특구로 발전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선전은 중앙 정부의 간섭을 배제한 채 입주기업들을 확실히 지원하려고 300여 가지 법규로 운영되는 중국의 대표적 경제특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남북경협에 참여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성공단 진출기업 등으로 구성된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를 25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김수방 남북경협특위 위원장은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 따라 크게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성공단을 선전 같은 특구로 지정해 줄 것은 남북한 당국에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북한 당국도 한국토지공사도 아닌 남한 정부를 믿고 들어갔다. 정부가 이제와 대책 없이 나 몰라라 하는 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남북경협특위는 북한 당국에 대해서도 입주업체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특위의 한 관계자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남북투자협력 약속에 따라 50년간 토지사용권과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받는다”며 “북한 당국이 관리 인력과 상주인원을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내보내겠다는 건 이런 기본권을 크게 침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北도 개성공단 필요성 인정

-- 11월 26일 매일경제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이 기업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북한이 개성관광 중단, 개성공단 남측 상주 인원 일부 철수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개성공단 사업 전면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는 나서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대목이다.

김 회장은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이유와 관련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3만 5000여 명이며 부양가족까지 감안하면 10만명에 달하는 점과 개성 시내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면서까지 근로자를 개성공단에 들여보내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북한이 개성공단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일부 중소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제3국행을 택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이 같은 기업에 개성공단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개성공단은 중소기업이 활로를 찾는 데 중요한 공단이고 남북관계의 완충 역할도 할 수 있다”며 “앞으로 개성공단에 250여 개 업체가 들어가 근로자 수가 7만~8만명 수준으로 늘어나는 만큼 남측이 기숙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투자비 1조4천억이나 들었는데...

-- 11월 20일 연합뉴스

‘개성공단 전면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에 처한다면 정부와 기업이 지금까지 개성공단에 쏟아 부었던 투자금 1조4000억원이 고스란히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부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 등이 개성공단 조성을 비롯해 철도·도로,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투자한 금액은 1조여 원에 달한다. 여기에 공단 입주 기업들이 생산설비 마련 등을 위해 투자한 금액 4000억원을 합하면 직접투자 규모만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로 2002년 9월 착공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에 투입한 투자금액은 5000억원이다. 2006년 3월 준공한 남북출입사무소(CIQ)에는 물류시설인 야드 조성 비용을 포함해 총 1513억원이 투입됐다.

2005년 3월 문산변전소에서 배전 방식으로 개성공단에 처음 전력을 공급한 한국전력도 지금까지 470억원 정도를 개성공단에 쏟아 부었다.

한국전력은 투자비 외에도 200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단에 전력을 공급하면서 140억원 손실을 봤다.

개성공단 용지 공급 1단계 사업을 맡았던 한국토지공사는 200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년간 국고지원비 1510억원과 자체 사업비 1131억원 등 총 2641억원을 투자했다. 개성공단에 2005년 12월 지사를 설치하고 유선전화 690회선을 구축한 KT도 통신설비 설치를 비롯한 통신망 구축에 7억여 원을 투자했다.

현재 88개인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평균 50억원을 생산설비와 인건비 등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개성공단 폐쇄에 따라 입주기업은 4500억원 투

자 손실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더욱이 현재 공사 중인 공장 건설 중단 등에 따른 간접 투자금액과 무형의 경제적 손실까지 합하면 개성공단 폐쇄 총 손실 규모는 2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평양~개성 경유 검토

-- 11월 27일 파이낸셜뉴스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26일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들여오는 파이프라인천연가스(PNG) 도입 노선과 관련, “북한의 가스수요를 감안해 블라디보스토크-원산-평양-개성-인천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또 PNG 도입과 관련, “북한을 통과하는 것이 안 되면 동해 해저 파이프라인이나 액화천연가스(LNG) 형태로 들어오는 방안 등을 러시아 가스프롬 측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사장은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러시아산 PNG 도입 노선에 대해 당초 알려진 동해안 노선, 즉 블라디보스토크-원산-삼척 LNG 생산기지 대신 북한의 평양과 개성을 경유해 인천 LNG 생산기지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평양과 개성은 가스수요가 다른 지역보다 높고 원산과 평양이 고속도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원산으로 내려온 뒤 평양과 개성을 거쳐 인천으로 들어오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휴전선 통과 문제에 대해서도 “개성에서 휴전선을 거치지 않고 인천으로 들어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단히 돌아서는 북한...민간단체 지원도 거부

-- 11월 27일 매일경제

북한이 다음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 육로 통행을 제한하고 개성공단 인력을 줄이라고 통보한 가운데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마저 제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평통 광명시협의회는 다음달 4일 연탄 10만장을 지원하기로 북한 측과 합의했지만 25일 개성에서 열린 후속협에서 북한 측이 연탄을 받지 않기로 입장을 바꿨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금강산 고성과 개성 지역에 연탄을 지원하고 있는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에도 방북 인원을 과거 20명에서 1명으로 줄이라고 요구했다. 개성 송도리협동농장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통일농수산사업단에도 다음달 개성지역 방문 인원을 70명에서 30명 선으로 줄이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시장주의 강경파’ 김일근, 특구 총국장에 임명한 까닭은?

-- 11월 27일 동아일보

최근 북한의 개성공단 위협을 현장에서 지휘하고 있는 김일근(53)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은 올해 10월까지 개성시 인민위원장(한국의 시장)으로 일하다 총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나 임명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총국장은 문무홍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장 등 남측 관계자들에게 상주인원 철수를 통보한 인물이다.

그는 2003년 6월 개성시 인민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또 같은 해 9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한국의 국회의원) 자리에도 올랐던 것으로 우리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그는 2003년 6월 개성공단 착공식에 인민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2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통과할 때 북측 지역에서 영접한 인물로 소개됐으나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다.

북한의 내각(행정부) 산하 민족경제협력협의회(민경협) 소속 기관인 총국의 최고책임자 자리는 올해 2월 주동찬 전 총국장이 물러난 뒤 한동안 공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를 중앙이 아닌 지방 행정기관장이던 김 총국장이 차지한 것은 향후 개성공단에서 남측 기업들이 철수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봉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26일 “김 총국장은 철저한 반(反)시장주의자로 알려졌다”며 “북한 지도부가 그에게 공단을 맡긴 것은 향후 남한 기업들을 철수시킨 뒤 북한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MB의 강경 대북정책 김태효 勳 비서관이 주도

-- 11월 27일 경향신문

남북관계가 악화일로임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어렵지만 정상적 관계로 가기 위한 진통’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북 정책에서 이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청와대 안팎에선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41·사진)을 우선 꼽고 있다. 통일·외교·안보 분야 선임 비서관인 그를 두고 “김성환 외교안보수석보다 세다. 대통령과의 심리적 거리로 말하면 김 수석보다 더 가깝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김 비서관은 그만큼 이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대통령의 신임도 두텁다고 한다.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출신인 김 비서관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4년부터

터 외교안보 자문을 해왔다. 당시 이 대통령이 먼저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서관은 고려대 현인택 교수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의 기본틀을 잡기도 했다.

김 비서관은 미국 외교정책과 안보전략이 주 전공으로 보수 색채가 강하다.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일관성을 갖고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을 최우선시하며 ‘갈 데까지 가 보자’는 식의 대북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김 비서관의 ‘힘’을 보여주는 예가 있다. 지난 5일 이 대통령이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 등 외교안보자문단과 간담회를 했을 때 김 수석과 함께 배석한 유일한 비서관이 그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비서관이 과거 남북관계를 비정상적으로 보고 있고, 남북문제에서 ‘상황’보다는 원칙을 강조하기 때문에 ‘터프’하게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신설된 자리인 대외전략비서관이 한반도 주변 4강과 남북관계까지 총괄하다 보니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큰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기업들 “예측불능, 신인도 추락...난파선 같다”

-- 11월 27일 뉴시스

민주당 천정배 의원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등 야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북한의 강경조치 이후 개성공단 현황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입주기업들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기업의 생산, 판매 및 투자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하며 회사의 대외신인도까지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입주기업들은 또 북측에서 강경조치를 발표할 때마다 거래처로부터 조업 여부, 부품조달 가능여부, 납기일 준수여부 등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결국 주문감소로 이어지면서 기업경영 압박과 운영자금 경색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유창근 부회장은 “상당한 혼란 속에 지내다 보니 중심을 잃어버린 난파선 같은 느낌”이라며 “정부가 경쟁력 있다고 홍보해서 개성공업지구에 들어간 지 몇 년 동안 착실히 활동해왔는데 재산과 신변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유 부회장은 “북한 역시 개성공단이 문을 닫게 된다면 해외 투자 유치도 다시 불가능할 것”이라며 “지금 2009년 신상품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포화를 맞다 보니 아무도 발주를 안 해주고 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같은 협회의 정기집 대표는 “정부가 바뀌면서 개성공단 투자가 약화됐고 남북관계가 경색돼 1단계 100만평 중 30%만 공장을 짓고 가동하고 있고 있다”며 “합숙소도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이 조차 핵 문제와 연계해 올해 내내 착공을 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개성공단의 중소기업 중 특히 제조업 쪽은 이미 국내에 생존 기반을 잃었고 이미 남아있는 기업들의 잔존 수명도 답이 나와 있다”며 “개성공단 사업만큼은 정부가 명백히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관계 경색, 민단-조총련에도 ‘불똥’

-- 11월 27일 노컷뉴스

최근 남북관계가 크게 경색되면서 일본의 민단과 조총련 사이에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민단 측은 최근 각 지부에 북한 국적에서 한국 국적으로 국적을 변경한 이후에도 조총련 산하단체나 관계기관의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과 조총련에 재정 지원을 하는 사람들의 현황을 다음 달 12일까지 조사해 보고하도록 했다.

조총련은 기관지인 조선신보를 이에 대해 “이번 조사는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기획한 것”이라며 “한국의 청와대와 국정원이 민단을 앞잡이로 내세워서 감행하는 민족분열 책동”이라고 비난했다.

민단 측은 국적 변경자와 관련한 현황 파악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조총련 측 주장에 정면 반박할 경우에 불필요한 갈등만 확대될 것을 우려해 즉각적인 대응을 피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다. 민단과 조총련은 지난 2006년5월 양측 지도부가 회동을 하고, 역사적인 화해에 합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나 당시 양측의 지도부 회동은 민단 내부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단행된 것이어서 이후에 민단 내부에서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개성 상주인력 오늘 1천여명 복귀(종합2보)

-- 11월 28일 연합뉴스

북한의 육로 통행 제한 차단과 상주인력 감축 등을 담은 ‘12.1 조치’에 맞춰 28일 오후 개성공단을 포함한 개성 지역 우리 측 상주인력 1천명 이상이 복귀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의선 육로를 통해 남북경협협회사무소 관계자 9명을 포함, 약 1천200명(개성관광객 제외)이 복귀할 예정이다.

1천200명 중에는 북한의 12.1 조치에 따라 철수 대상으로 구분된 개성공단 업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잔류 대상으로 구분돼 다음 주 중 다시 입북하는 인원이 섞여

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또 이날 복귀하지 않는 나머지 철수 대상자들은 전원 29일 돌아올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 당국은 12월1일 이후에 허용할 개성공단 기업과 관리위의 상주 인원수를 놓고 막바지 조율을 진행 중이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현재까지 체류증을 소지한 개성공단 관련 인원 4천168명 중 1천500~1천700명 정도는 12월1일 이후에도 개성에 상주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라며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체류 허가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으로부터 체류 허가 통보를 받은 인원 중에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직원 37명이 포함돼 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또 개성 관광객 216명은 이날 오전 마지막 관광길에 나섰다. 작년 12월5일 시작된 개성관광은 이날 일정을 마치면 총 11만1천770명의 관광객을 기록한 채 잠정 중단된다.

마지막 운행을 하게 된 경의선 열차도 기관차 1량과 차량 1량 만으로 화물없이 오전 9시30분께 도라산역을 출발, 북측 봉동역으로 향했다.

“北, 내년부터 중국산 중고차 밀매 금지”<RFA>

-- 11월 28일 연합뉴스

북한이 내년부터 북한의 자동차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중고 자동차 밀매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전했다.

RFA는 중국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 이같이 전하고 북한에선 지난해 1월 일본이 일본산 자동차의 대북 수출을 금지한 이후 틈새를 노린 중국산 자동차의 밀무역이 성행했다고 RFA는 설명했다.

북한에서는 평화자동차와 계약을 맺은 화천자동차 이외에는 중국 자동차를 수입할 수 없게 돼 있다.

RFA는 이 소식통을 인용해 또 “북한은 내년부터 자동차 수입 관세도 대폭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동안 중국 상인들이 북한의 낮은 관세를 이용해 판매했던 미국 GM의 뷰익과 독일의 폴크스바겐 등 일부 자동차의 판매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개성관광 시작에서 중단까지>

-- 11월 28일 연합뉴스

개성관광은 당초 2003년 개성공단 착공식에 맞춰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공단가동이 본격화된 이후에 진행하자는 북측의 의견에 따라 미뤄져왔는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2005년 8월 26일 시범 관광이 세차례 실시됐다.

하지만 개성관광 요금 문제를 놓고 북측과 현대아산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현대아산의 대북 사업을 주도해온 김윤규 부회장이 비리 의혹으로 물러나면서 북측이 현대를 멀리해 개성 본 관광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더구나 북측이 2006년 7월에는 현대와 개성관광을 하겠다는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면서 개성관광 사업자까지 롯데관광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개성 관광 문제는 다시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다.

그동안 상황을 지켜봤던 롯데관광 또한 북측의 요청으로 개성 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현대아산과 롯데관광, 통일부 그리고 북측이 얹히면서 개성 관광 시행은 요원한 일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현정은 회장은 지난해 11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개성관광 실시라는 선물을 받아냄에 따라 그해 12월 5일 역사적인 개성 관광이 시작됐다.

월요일을 제외하고 1주일에 6차례 실시해온 개성관광은 7월 금강산 관광 중단이 있기 전까지는 하루 평균 300-400명 정도가 이용했으며 7월부터는 200-300명 정도로 감소했지만 꾸준히 찾아 지난 10월 15일 누적 인원 10만명을 돌파했다.

이 기간 개성 관광객은 하루 평균 370명, 월평균 1만명을 기록했으며 외국인도 2천600명이 개성을 방문했다. 또한 지난 14일에는 올해 개성 관광객만 1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DJ “MB 남북관계 의도적 파탄”

-- 11월 28일 서울신문

김대중 전 대통령은 27일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정책’은 김영삼 정부가 따돌림 당했던 것처럼 통미봉남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현 상황은 시대가 역행하는 민주주의와 경제의 위기”라고 규정하고 “민주당과 민노당, 시민단체가 ‘민주연합’을 구성해 길을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을 때 김 위원장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살리기를 해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고 했다. 북한은 ‘친미국가가 되고 싶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대북지원에 대해 “우리의 앞날은 미국이나 중국이 아닌 유라시아에 있고, 북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면서 “북에 퍼주기가 아니라 퍼오기”라고 강조했다.

대북 육로 수송 마지막 물자, 평양으로

-- 11월 28일 노컷뉴스

북한이 12월 1일부터 육로로 물자 반입을 차단하기로 한 가운데 마지막 대북지원 물자가 27일 개성을 통해 평양으로 수송됐다.

한국기아대책(재)섬김과 인정건설(주)는 27일 평양시 락랑구역 통일거리에 신축중인 락랑섬김인민병원에 들어가는 외장마감자재 및 유리 등 11톤 화물차 5대 물량을 파주에서 개성 봉동역까지 육로를 통해 북측 민화협에 전달했다.

북한 측이 오는 12월1일부터 육로로 수송하는 대북 물자를 차단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대북물자가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회장, 정정섭)이 평양에 건립 중인 종합병원인 락랑섬김인민병원이 올해 말까지 외장 공사를 마치고 내년 6월쯤 준공할 예정이다.

평양 락랑섬김인민병원은 내과,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치과 등 6개 과에 76베드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내년 6월에 준공되면, 북한 평양 락랑구역 지역주민 5만 명이 의료 혜택을 받게 된다. 총 사업비 70억 원이 소요되는 락랑섬김인민병원은 완공 후 5년 동안 북측 민화협과, 조선의학회가 공동운영하게 된다.

北 출입 인원·시간, 오늘부터 대폭 축소

-- 12월 1일 뉴시스

북한의 ‘군사분계선(MDL)을 통한 육로통행 제한·차단’ 조치에 따라 1일부터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입·출경 인원이 크게 축소된다.

서해지구는 출입은 매일 3번씩으로 제한된다. 출경시간은 오전 9시와 10시, 11시에, 입경시간은 오후 3시와 4시, 5시다. 기존에는 매일 오전 8시~오후 2시30분간 12회, 오후 2시~5시간 7회 각각 출입경이 있어왔다.

동해지구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각각 출경 및 입경이 이뤄지게 된다. 기존에는 매일 각각 2회씩 진행됐다.

또 매회 출입 인원은 250명 이하로, 차량은 150대 이하로 제한되며, 이는 기존 인원 500여명과 차량 200대에서 절반 정도 축소된 수치다.

앞서 28일에는 경의선 남북 화물열차와 개성관광이 잠정 중단된데 이어 개성공단 남북경협협회사무소와 관리위원회, 입주기업 등 개성 내 체류 중이던 철수 대상자는 지난 주말에 걸쳐 모두 귀환했다.

이와 함께 통행 신청자의 변경·추가가 어려워지고, 우리측 정기출판물 반입도 차단된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북측 동·서해 지구 군사실무 책임자 명의의 대남 전화통지문을 통해 ‘부모·처자 사망, 구급환자’를 제외하고는 변경·추가된 통행에 대해 통행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野 시민단체 남북문제 “反MB 연합”

-- 12월 1일 경향신문

과국 위기에 직면한 남북관계를 계기로 ‘반 MB(이명박) 연합’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노선과 지향점이 상이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3당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면서다.

야3당은 30일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에 대북 강경 정책 전면 수정, 6·15공동선언 및 10·4정상선언 이행 천명 등을 요구했다.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국회 결의안 제출, ‘개성공단 살리는 초당적 모임’ 결성 등의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야권 내에서 그동안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에 맞서 연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지만,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않았다. 결국 단절의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에 대한 위기감이 본격적인 야권 공조의 매개가 되고 있는 셈이다.

야3당은 회의를 위해 사전 정지작업 등 상당한 공을 들였다. 당 관계자들이 수일간 실무협의를 거쳤고, 당 대표들도 서로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며 의견을 조율했다.

이 같은 준비작업의 결과 회의에선 현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야당의 인식에 차이는 없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정부·여당이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충고를 외면하면서 남북관계가 파탄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가 하나부터 열까지 청개구리 행보”라고 지적했다.

‘반 MB 연합’ 구축은 지금까지처럼 파편화되고 소수인 야당의 상태로는 거대 여당에 대항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절박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제1야당이지만 10%대 지지율에 묶여있는 민주당은 선명성 강화를 기대하고, 민주노동당 등은 ‘소수의 한계’를 디디고 보폭을 키울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North Korea edging closer to China

북한이 점차 중국에 가까워지고 있다

-- 11월 26일 UPI

출처: http://www.upiasia.com/Economics/2008/11/26/north_korea_edging_closer_to_china/3314/

North Korea has sped up efforts to develop its northwestern industrial city of Sinuiju, bordering China, as a special

economic zone in a bid to exp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its communist ally, Seoul sources and media reports said Wednesday.

The move comes as North Korea is cutting off economic ties with its capitalist neighbor, South Korea, and moving to close down their joint tour and industrial projects, which served as a channel for the impoverished country to learn about the free market economy.

North Korea has recently accelerated its project to develop Sinuiju as a special economic zone, Seoul's Yonhap News Agency said, citing sources in Beijing. Work is underway to build new buildings and facilities in the border city, the agency also quoted border traders with North Korea as saying.

.....

북한이 북서쪽에 위치한 동맹국인 중국과의 경제 협력 확대의 일환으로 중국 국경 인접 도시인 신의주를 특별 경제 구역으로써 발전시키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남한에서 보도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자유 시장 경제의 도입 채널로 북무하고 있는 남한과의 관광과 경제 협력을 단절하면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최근 신의주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고 알려졌다. 신의주에는 각종 건물과 시설이 건설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의주 방문도 그 일환으로 보여진다.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일은 신의주의 기계와 비누 공장을 시찰한 것으로 지난 화요일 북한 매체에 의해 보도되었다.....

NKorea prepared to shut down Kaesong estate: analysts 북한이 개성공업지구의 폐쇄를 준비한다

-- 11월 27일 AFP

출처: http://www.google.com/hostednews/afp/article/ALeqM5jlS9ZzziwH1b9_VzZ0PK_-RfUhKQ

Communist North Korea is prepared to shut down a sprawling Seoul-funded industrial estate -- at least temporarily -- as part of its fierce dispute with South Korea's conservative government, analysts say.

The future of the Kaesong estate has been clouded by uncertainty since the North announced it would impose even tougher border controls from December 1.

It said it would halt a cross-border rail service and a day tour and "selectively expel" South Koreans from the estate, which was built just north of the border as a symbol of reconciliation under a previous Seoul government.

The curbs are likely to hamper operations at Kaesong, where 35,000 North Koreans earning about 70 dollars a month work for 88 South Korean light industrial firms.

The North indicated this week it would not force the closure of the estate but some analysts believe this is on the cards.

.....

북한이 남한의 보수 정부와의 갈등으로 개성공단 (최소한 일시적으로) 폐쇄를 준비 중인으로 것으로 분석가들은 예측했다. 북측이 12월 1일부터 보다 강화된 군사분계선 통과 및 개성관광과 경의선 열차의 중단을 천명함에 따라 공단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지고 있다.

금주 북측이 밝힌 바에 의하면 개성공단의 폐쇄를 압박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이 또한 하나의 카드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자본주의의 실험으로 봄으로써) 국가주도의 경제구조의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측은 남측 정부가 개성에 이미 계획되었던 투자를 할 것이라곤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고, (개성의) 경제적인 이득은 정치적 위험성에 감수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동국대 김용현 교수가 언급했다

北の日本人拉致、国際社会が認識を 英下院外交委が報告書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 보고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에 대해 국제사회가 인식

-- 12월 1일 산케이신문

출처 : <http://sankei.jp.msn.com/world/korea/081201/kor0812010123002-n1.htm>

英下院外交委員会は30日、日本と朝鮮半島に関する報告書を発表、北朝鮮による日本人拉致問題について「日本国民と政府にとって感情的な問題であるのは当然で、国際社会はそれを認識すべきだ」と強調、平壤の英大使館を通じるなどして北朝鮮に圧力をかけ、日本への支援を継続するよう英政府に勧告した。

一方、第二次大戦中の旧日本軍の従軍慰安婦問題は「韓国国民と政府にとって痛ましい感情的問題」であり「その重要性は日本を含め国際的に理解されるべきだ」とした。

さらに、竹島(韓国名・独島)をめぐる日韓の対立は「残念だ」と指摘。両国が「永続的な問題解決に向けたメカニズム」をつくることを促進するよう英政府に求めた。(共同)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30일, 일본과 한반도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일본국민과 정부에게 심각한 문제이며, 국제사회는 이것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 평양의 영국대사관을 통하는 등 북한에 압력을 가해 일본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도록 영국정부에 권고했다.

한편, 2차 대전 중 일본군 중군위안부 문제는 “한국민과 정부에게 참혹한 문제”이며, “그 중요성을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해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독도를 둘러싼 한일의 대립은 ‘유감’이라고 지적하며, 두 나라가 ‘문제 해결을 위한 메카니즘’을 만드는 것을 촉구하도록 영국 정부에 요구했다.(공동)

추천 논문

개성공단 개발에 있어 정경분리 현황과 개선 방향

전현준(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첫째, 정경분리원칙은 정치군사적 긴장요인에도 불구하고 비정치적, 특히 경제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다.

둘째, 정경분리원칙은 정부 차원의 협력과 민간 차원의 협력을 분리하고자 한다.

셋째, 정경분리원칙 하에서 민간기업이 자율적 판단 하에 대북경협을 추진하되, 정부는 민간접촉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그러나 이유야 어떻든 현재 북한이 남한의 대북 빠라살포를 이유로 개성특구의 기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모든 것을 정치우선주의로 해석하고 해결하려는 북한의 태도는 개성공단 사업의 중요한 장애요인 중 하나이다.

또한 금강산 ‘박왕자씨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개성관광까지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처럼 남한에서도 정치군사적 이유로 개성공단을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엄연히 존재한다. 개성공단 정도로 북한에게 무슨 큰 시혜라도 베푸는 양 이것을 중지한다고 겁을 주면 북한이 납득 없으려 빌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아울러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지금도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Made in Korea’로 인정하지 않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문제이다.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 있을 때마다 개성공단 중지를 카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 성공을 위해서는 각 주체의 성실한 임무 수행이 필요하다.

북한은 핵문제 해결에 협조 자세를 보이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남한도 정책 결정의 투명성 제고와 절차의 민주성 확보로 초당적인 협력을 유도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산 제품은 고관율을 적용받음으로써 대북 경제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미국시장 진출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해결하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그때까지의 지원이 요청된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하루속히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 통제 해제문제를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 더욱이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미국산 성분이 10%만 포함돼 있어도 통제를 하는 『수출관리법』과 그 시행령 격인 『수출관리령』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처럼 개성공단이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하여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지도자는 물론 주민들까지 인내와 희생이 필요하고,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이 글은 11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발표된 발제문으로 전문은 토론회 자료집에 실려 있습니다.)

함께 보는 최근 북한 단신

북한, 노동신문 “북남관계 파탄의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 보도

○ 12월 1일 노동신문은 ‘북남관계파탄의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12월 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북로 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는 중대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남조선당국에 정식으로 통고하였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우리의 중대조치가 마치 북남합의에 배치되는 것처럼 떠드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집권하기 바쁘게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짓밟고 그 리행을 공공연히 거부해 나선 자들이 누구인데 이제 와서 ‘합의사항에 배치’니 뭐니 하고 뻔뻔스럽게 떠들어 대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노동신문은 “북남공동선언들을 ‘배타적’이니, ‘대남전략의 산물’이니 뭐니 하고 헐뜯으면서 그에 완전히 배치되는 반민족적인 ‘비핵·개방·3000’을 들고 나오고 이제는 거기에다 ‘상생, 공영’이라는 허울을 씌워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광고하며 이미 이룩된 북남합의들을 짓밟고 있는 장본인은 또 누구인가. 그들이 대화일방인 우리를 해치기 위한 반공화국 대결 책동의 도수를 무한정 높이고 있는 그 자체가 역사적인 두 선언들에 대한 위반이고 모든 북남합의들에 배치되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